

# “해상 대중교통 관련 정책 개발·지원 시급”

### 육상교통정책과 비교해 예산 등에서 큰 차이 주철현 “섬 주민들 위한 개선 대책 마련해야”

섬 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인 연안여객선과 도선 등 해상 대중교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에 따르면 2020년 개정된 ‘대중

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상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고,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대중교통법에 근거해 2022년 3월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하면 육



상 대중교통은 차내 환경 혼잡 개선,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지역 확대 등 정책 목표가 명확하다.  
버스정류장 내 사각지대 보완장비, 도시철도차량의 공기정화설비 장착 필요성까지 매우 충족하고 세밀한 추진전략이 수립돼 있다.  
하지만 해상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으로서 해상교통의 전망과 비전은 찾아볼 수 없고 2022년 예산안에 연안여객선으로 안정화 지원에 74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이용객이 적어 어려움에 처한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철도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에만 2022년 3천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육상 교통정책과 해상 교통정책의 극심한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등 육상 대중교

통 면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것처럼 도선과 연안여객선 면허권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연안여객선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반영해 2020년 대중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시책을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해양수산부가 대중교통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

다.  
이어 주 의원은 “현재 여객선의 km당 운임은 306원 수준, 125원 수준의 버스·전철은 물론, 고속철도나 항공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 수준”이라며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과 도선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열악한 연안여객선 운영 선사의 경영 상황이 주민의 해상이동권이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긴급상황 발생 시 대중교통에 걸맞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제도 개선·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수기자

# 여야, 국조·검수완박·前정권 수사 ‘정면충돌’

### 결산심사부터 강경 대처 예고 운영위·법사위 ‘전쟁터’ 될듯

9월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다.  
국정조사·‘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전(前) 정권 수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며, 당장 이번주 줄줄이 예정된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에서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첫 번째 정기국회인 만큼 시작 전부터 여야의 기싸움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당장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는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운영위 회의에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심사가 진행된다.  
운영위엔 김대기 비서실장·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하기로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수수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꺼내 들고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할 태세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7일 이런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겠다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오는 9월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며 기싸움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여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현실화하긴 쉽지 않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통해 대외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정부·여당 흔들기에 나섰다. 분석이 나온 다.  
실제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과반 의석

수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를 향후 대외 협상 카드로 활용할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

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정부·여당 발목잡기에만 치중할 모습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엄호할 전망이다.  
22-24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소위원회 등이 예정된 법사위에서도 여야의 일전이 예상된다.  
법무부의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안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즉각 법 제재정에 나서 ‘부패범죄·경제 등’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법무부에도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에서도 한 장관에 야당의 집중공세가 쏟아질 경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선 ‘탈북어민 복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잇따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정치수사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국정조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 초 새 지도부 선출” 주호영, 올해 말 전대 예상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차기 당대표 선출 시기와 관련해, “연말경인 12월께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말이나 2월께 아마 새 지도부가 뽑힐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KBS 방송에 출연, “집권 첫해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 방어도 해야 하고 필요법안 통과도 시키고 국정감사, 예산도 있으니 까 이 중요한 국회 기간 중 여당이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나라와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권싸움을 한다’고 비춰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적어도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뒤 전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지지 가져분 신정에 대해선 “가처분 결과가 가각될 거란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설사 절차적인 문제로 만약에 가져분 결과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절차를 고쳐서 하면 된다”며 “정치적으로는 가져분이 받아들여지면 당이 곤란할 거라 하지만, 저희는 가져분 결과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 위원장은 당 내홍의 책임과 관련해선 “국민은 집권컨대 대통령이 어른인데 (이 전 대표를) 포용하면 해결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 이런 걸로 사건이 확대된 측면이 있으니까”라면서 “또 일부 당원들 중에서는 이 사태의 시작은 이 전 대표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며 달리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 내홍 수습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이 전 대표를) 만나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오래되면 서로가 상처 있지만, 대통령도 상처가 많죠”라며 “가급적 이 문제를 재판으로 끝까지 공격하는 걸로 두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잘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 김회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확대돼야”

2018년 도입된 이후 약 16만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임금 향상과 장기 재직에 기여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없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은 21일 “정부 관계 당국이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이유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올해 말 일몰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사업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공제에 가입해 5년간 720만원(매달 12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천80만원)와 기업(1천200만원)의 돈을 더해 3천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



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제도 폐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

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공제가입 청년재직자에게 월 38만원의 임금 상승 효과도 이끌어내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해 주는 효과가 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을 핑계로 청년 자산 격차 완화 지원책은 축소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